

환동해경제권 형성 선도를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

- 동북아의 불안정한 정치환경, 국가간 관계의 유동성 등으로 환동해권에서의 경제권 형성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편이나, 중국 동북3성의 개발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에너지 수송시설 개발, 그리고 북한의 개방이 맞물리게 되면 환동해권에서의 경제교류 및 협력 가능성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물류망과 에너지 클러스터 형성을 염두에 두고 환동해 연안지역의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차원에서는 동북아의 지역공공재 중심의 개발이라는 장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중단기적으로 관련지자체와 함께 연안지역의 개방거점을 중심으로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환동해권 지역의 취약한 경제력, 지자체들의 제한된 능력을 감안할 때 지방간 경제협력은 사람, 물자, 에너지의 수송 축과 같은 소수 부문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선도협력 과제로서 환동해 항만간 페리노선 확충, 수산업 파트너십, 환동해권 단체관광객 무비자, 동해연안지역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1. 연구의 의도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동해안 지역을 대외개방형 국토축의 하나로 남북교류 및 동북아 개발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환동해권의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본격적인 동해안축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동해안지역 지자체들도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동해권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들의 경제적 취약성, 상호 관심사항의 불일치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중국 동북3성의 개발, 러시아 극동으로의 에너지 수송시설 통과, 그리고 북한의 개방 움직임 등에 따라 환동해권의 안보경제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동해안지역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경제의 잠재력과 지자체의 관심사항을 감안하여 지자체간 협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

2. 동북아 정치·경제 여건변화와 환동해권의 발전 전망

- 동북아 정치·경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

<표 1> 동북아 정치·경제 변화의 시나리오

구분	국경 부분개방	국경 완전개방
정책주도적	주요 개방지역 중심개발	지역공공재 중심개발
시장주도적	교역중심적 개발	교역/투자/기술교류

- 환동해권은 현재 국경의 개방정도가 미약하고, 관련국의 정책도 소극적인 차원 및 제한적인 교역과 인적교류에 머물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동체나 수송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국가간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지역 공공재 구축에서 중심적인 입지를 점하게 될 것임

➡ 완전개방과 지역공공재 중심의 개발이라는 장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중단기적으

로 환동해권 연안의 개방지역을 중심으로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동해안 지역의 현실적인 대안임

- 중국 동북3성의 개발과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수출기지화 등 최근 개발 동향은 환동해권 경제협력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동북3성 개발은 산업발전과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중간재 수요를 창출하게 되어 중간재와 완제품의 수출입 물류를 발생시킴
 - 현재 대련항 중심의 수출입물류 일부가 환동해권 교역루트를 이용할 가능성 증대
 - 시베리아 송유관이 페레보즈나야로 이어질 경우, 울산을 비롯한 환동해권 거점항만 지역에 석유관련산업의 클러스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이라는 자극요인으로 북한의 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북한 동해안의 나진, 선봉, 청진, 원산 등 항구도시의 환동해권 교역항으로 재생가능함
- ➡ 다만 북일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당분간 중국, 러시아,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 좌측 연안지역에서의 협력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함
 - 물류수송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환동해권의 잠재력과 취약점 그리고 발전전망

- 환동해권의 잠재력은 에너지, 광물, 농수산 등 자원분야에 있고 수송기반의 구축과 국경장벽의 제거로 동북아의 자원공급기지 및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함
- 환동해권 연안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잠재력도 보유
- 현재 권역내 경제기반의 취약성과 자체 완결성의 부족으로 배후지역과의 연계 없이는 발전 불가능하나, 중국의 동북3성 등 배후지역의 발전이 본격화되고 자원개발 및 수송, 중간재와 완제품의 생산 및 교역이 증가하면 환동해연안지역은 자원가공산업과 물류수송산업의 거점 역할이 가능함

4. 환동해권 지방간 협력의 실태와 평가

- 1990년대 이후 지자체간 교류 협력은 우호친선증진 이외에 투자와 방문객유치를 주 목적으로 전개됨
- 강원도, 경상북도, 니이가타현 등 일부 지자체의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차원에서의 폐쇄성, 지역간의 상호관심사 불일치, 지방정부의 역량 미흡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함
-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은 환동해권 교류·협력의 필요성의 공감대 확산과 제도적인 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동해연안지역과 배후지역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 대안지역간 관심사항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보제공과 공통 관심분야에서 구체적 프로그램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2> 환동해권 구성지역의 주요 관심사항 및 협력상대

구분	당면 목표	주요 관심사항	주 협력상대
한국 동해안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 교역확대 • 관광객유치	• 일본, 중국, 러시아 • 일본, 중국
일본 서해안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 교역확대 • 관광객유치 • 기술/ 지식교류	• 중국, 러시아, 한국 • 한국, 중국 • 중국, 한국
중국 동북3성	산업구조 고도화	• 외자유치/ 기술도입 • 교역확대 • 교역루트확보	• 일본, 한국, 기타 • 일본, 한국, 러시아 • 러시아, 북한
러시아 극동	산업구조 고도화	• 외자유치 • 에너지/ 화물 수송로 구축 및 연결	• 한국, 미국, 일본 • 중국, 한국,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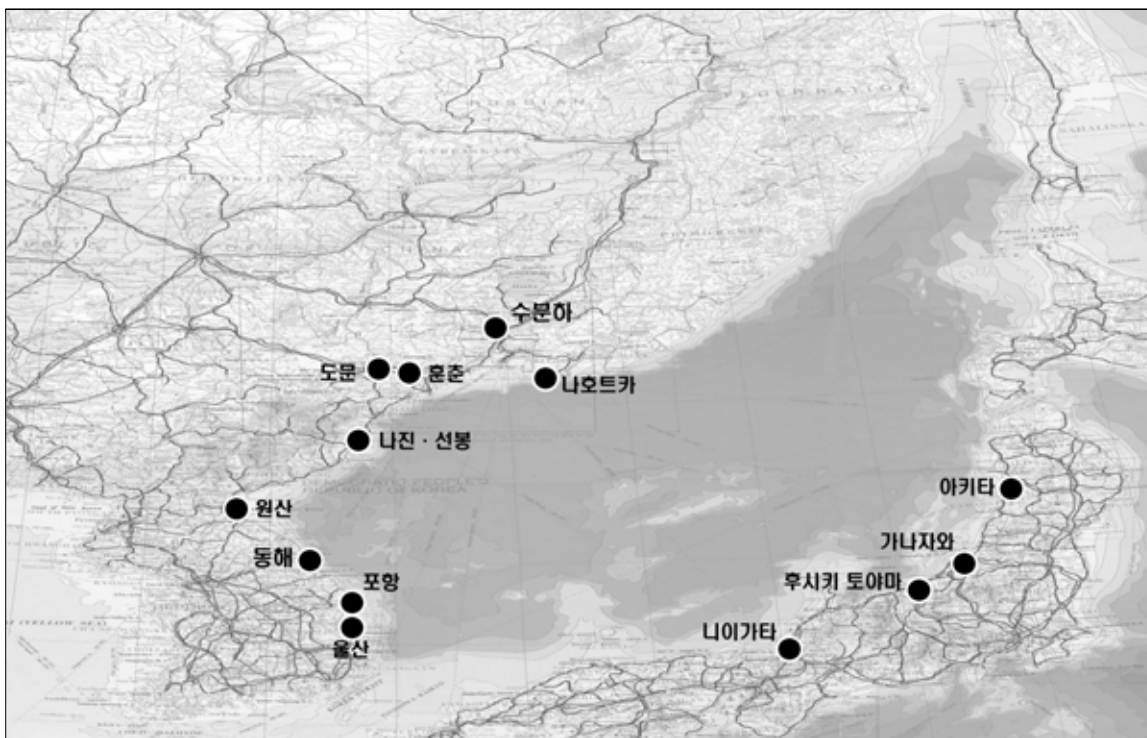
5. 전략적 접근을 통한 환동해경제권 형성 기반 조성

- 환동해권의 정치·경제·안보적 제약요인, 경제기반의 취약성과 지자체의 제한된 능력을 감안할 때, 지자체 중심의 경제협력은 선택적·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함
- 전략적 접근은 국가차원과 민간협력 기구를 지자체의 협력과 접목시키는 다중적 접근방식 채택, 속초-자루비노 페리와 같은 유망분야에서의 소규모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 차원에서 구성된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와 「동북아자치단체연합」과 같은 월경적 협력 기구를 통합 운영, 「자유지역연계망」과 같은 전략적 개념과 도구의 적용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함

6. 환동해권의 결속을 위한 전략적 방안

- 당분간 전면적 개방과 교역자유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동해권에서의 협력 증진과 결속을 위해서는 연안지역에 경제자유지역을 지정하고 이들간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함

<그림 1> 환동해권 자유구역



- 현재의 출입국 절차로서 환동해권에서의 인적교류 확대나 관광객 유치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단체관광에 한하여 무비자제도를 도입하고 일국관광뿐만 아니라 다국 연계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함
- 환동해연안 물류에너지 복합수송축의 조성
 - 동북아 전역에 걸친 물류·에너지 수송축 조성은 장기에 걸쳐 국가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관련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환동해권 연안지역 일부에서 축의 조성 과 관련산업의 집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진행 중인 두만강지역에서의 교통망연결 및 확충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금강산 관광을 위한 속초-고성간 교통망연결 및 확충사업을 강릉에서 원산까지 확대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동해연안 종단고속도로 건설로 부산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아시안 하이웨이를 구축

7. 중점협력과제

- 중점협력과제로서 동해안지역의 잠재력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환동해권의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야 함
 - 중점협력 과제 중 부문간 중첩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크며 단기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선도과제로 추진
- 추진체계는 개별 지자체의 협력방식에서 탈피 관련지자체의 연합기구를 통한 광역단위에서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임
- 사업별로 관련기구나 중앙정부 및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사업추진의 실천력을 제고함

<표 3> 분야별 중점협력과제

분야 \ 단계	단기	중장기
물류·수송	• 두만강 지역에서의 항만배후지 연결 도로 및 철도 • 환동해 항만간 페리노선 확충	• 환동해권 고속도로 및 철도 확충 • 컨테이너 연결을 위한 항만간 협정 • 환동해자유지역 연계망구축
농림수산	• 수산업 파트너십 결성 • 연해주 농업 및 수산기지 건설	• 어족자원보호 협정
관광	• 원산-강릉 도로 확충 • 환동해권 자전거도로 신설 • 동계스포츠 리그 개최(아이스하키) • 환동해권 단체관광객 무비자 추진	• 환동해권 직항노선 확충 • 발해권 문화유적 발굴 및 복원 • 환동해권 연계관광 프로그램개발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탐방 등)
에너지 및 환경	• 환동해권 에너지클러스터 형성 기본 구상 • 동해연안지역 대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 • 연안환경 보전 행동강령 공동 작성	• 환동해권 에너지클러스터 형성에 대비한 기반시설 정비 • 동해 환경계획

주) 굵은체로 표시된 부분은 선도과제임

<표 4> 환동해권 지방간 협력체계의 현황과 대안

현황	대안
• 개별적 지방간 국제협력체 운영 (예: 강원도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 경상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니이가타 동북아경제회의 등)	• 동해안지역 지자체의 연합협의회 결성 (예: 강원도-경상북도-대구시-울산시)
• 지리적 범위, 상호관심사 불일치	• 광역단위에서의 국제협력 전략 수립 및 대안 지역과 협력(일본 서해안지역은 이미 호쿠리쿠 지역 중심으로 공동대응 중임) • 상호관심사항 중심으로 선도지자체 선정 중점과제 추진

<그림 2> 광의와 협의의 환동해권



<표 5> 광의와 협의의 환동해권 인구·경제지표

구 분	면적 (km ²)	인구 (만 명)	GRDP (억 달러)	수출 (억 달러)	수입 (억 달러)	대외 의존도*
한국동해안지역 ①	38,604	1,160	1,411	624	439	75
북한동해안지역 ②	47,300	702	57	2.5	5	13
일본서해안지역 ③	79,509	2,058	5,492	616	397	18
홋카이도 포함 ④	162,963	2,625	7,081	636	463	16
중국 동북3성 ⑤	787,300	10,725	1,669	162	137	18
길림성 ⑥	187,400	2,659	357	22	40	17
러시아 극동 ⑦	5,478,200	695	90	54	10	71
연해주 ⑧	165,900	212	20	11	5	80
협의의 환동해권 (①, ②, ③, ⑥, ⑧)	601,044	6,987	8,590	1,248	897	25
광의의 환동해권 (①, ②, ④, ⑤, ⑦)	6,541,097	15,907	10,308	1,478.5	1,054	25

* 대외의존도 = 수출입액/GRDP×100

국토연구원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wbkim@krihs.re.kr, 031-380-0222)